

시론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
- 경찰청 집회시위관리위원회 위원

제주 4.3을 보는 역사 인식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역사는 어느 한 순간도 격동의 세월이 아닌 적이 없었다. 구한말 서구 문물의 도입을 둘러싼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그랬고, 국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기의 처절한 독립투쟁이 그랬고, 해방 이후의 정부수립과정도 그러했다.

특히 1945년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극심한 혼란과 격동 속에 무수한 갈등과 충돌을 보여준다. 당시의 대립과 갈등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역사교과서 논란처럼 과거사 인식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특히 진영 논리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국가적 분열의 문제들은 더욱 심각하다.

1948년 5.10총선 직전에 벌어졌던 제주 4.3 또한 그러한 역사적 비극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제주 4.3의 배경은 당시 이승만의 단독정부론과 김구의 통일정부론으로 대표되던 정부수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정치적 대립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성으로 결론이 나자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

던 것이었고, 당시 -아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미군정 시기였지만-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제주 4.3에 대한 진실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과거에는 남로당의 무장봉기에 대한 무력진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그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 많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했다. 문제는 제주 4.3이 진영논리와 결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4.3의 경우 무장봉기가 있었다고 해서 진압과정에서의 민간인 희생을 정당할 수 없는 없다. 아무리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영똥한 민간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다고 해서 남로당의 무장봉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양 측면을 동시에 보는 가운데 각각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진영 논리에 치우친 주장들은 한쪽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다른 쪽의 잘못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다. 마치 더 큰 잘못에 의해 작은 잘못은 묻히고, 오히려 희생자라고 옹호되기도 한다. 그러면 민간인

희생자가 아닌 무장봉기의 주동자들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무장봉기가 없었다면 정부가 무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는데?

해방 직후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무장봉기를 계획한 남로당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설령 순수하게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성이 잘못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무장봉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무장봉기를 정당화한다면, 역대 어떤 정부가 이를 피할 수 있겠는가.

제주 4.3 추념식에서 발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가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 것은 제주 4.3을 가리켜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를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텃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마치 남로당의 무장봉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당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옳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독정부 구성과 통일정부 구성 사이의 대립은 -비록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론과 원칙론의 대립이었다. 그런데 원칙론이 현실이 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김

구를 몇 차례 만나면서도 통일정부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던 김일성의 태도에 있었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그로 인해 김구가 김일성에 의해 이용되었다는 평가도 나왔던 것이다.

결국 통일정부의 구성을 위한 남북한의 자유총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남한만의 총선을 통한 정부수립이 불가피해졌던 것이며, 5.10총선에 의한 제헌국회의 구성, 제헌국회에 의한 헌법제정과 헌법에 따른 정부수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는 옳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진실을 통해 과거를 치유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역사를 권력자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조선시대에도 당대의 역사를 왕이 보지 못하게 했다. 이를 무시했던 연산군의 사례는 권력자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은 일관되게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정

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정당화를 위한 역사 교과서 개편을 추진해왔다. 물론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개편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진영에 있는 학자들을 앞세워 역사교과서를 개편한 결과 역사교과서 논쟁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반성하고, 正道를 걸어야 한다. 현대의 중요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역사에 맡겨야 한다. 그 평가에 정권이 앞장설 경우에는 진영논리에 따른 편향성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양극화이다. 功과 過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만을 강조하거나 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곧 편향성인 것이다.

제주 4.3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72년 전의 사건이지만, 제주 4.3은 상당수 관련자가 생존해 있고, 여야의 견해 차이가 뚜렷한 현대의 사건이다. 이를 정부가 앞장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편향성의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욱이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이 한쪽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